3대메가프로젝트가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 검증회

일시	2026년 11월 12일(목) 저녁 7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3)
사회	권우현(환경운동연합 책임활동가)

온라인 중계링크

지역을 잘 먹고

이원호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거와 부동산, 지역 불평등에 미친 영향
- 초광역 산업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지역의 주거 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 기업 중심의 지역개발이 실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

손어진 | **녹색당 부대표, 광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광주형 일자리와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의 경험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이 실제 노동조건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 메가프로젝트가 지역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토

선지현 | **삶과 노동을 잇는 배움터 이짓**

- 반도체 산업과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에 미친 실제 영향
- 기업 투자와 산업 유치가 지역 주민들의 삶에 가져온 변화
- 기존 반도체 산업단지의 경험을 통해 메가프로젝트의 지역발전 효과 검토

잘 살게 하는가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2025 충북 수출 중 반도체 60.2%



성장은 충북에,
그 몫과 피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충북의 지역부정의

반도체 산업·산단이 지역경제에 남긴 것, 투자 유치가 바꾼 주민의 삶,
기존 산단·특구의 경험으로 본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선지현

성장률 1위, 누구의 성장인가

11.9%
2026년 2분기 실질 GRDP 증가율
17개 시·도 중 1위

22.4%
같은 분기 광업·제조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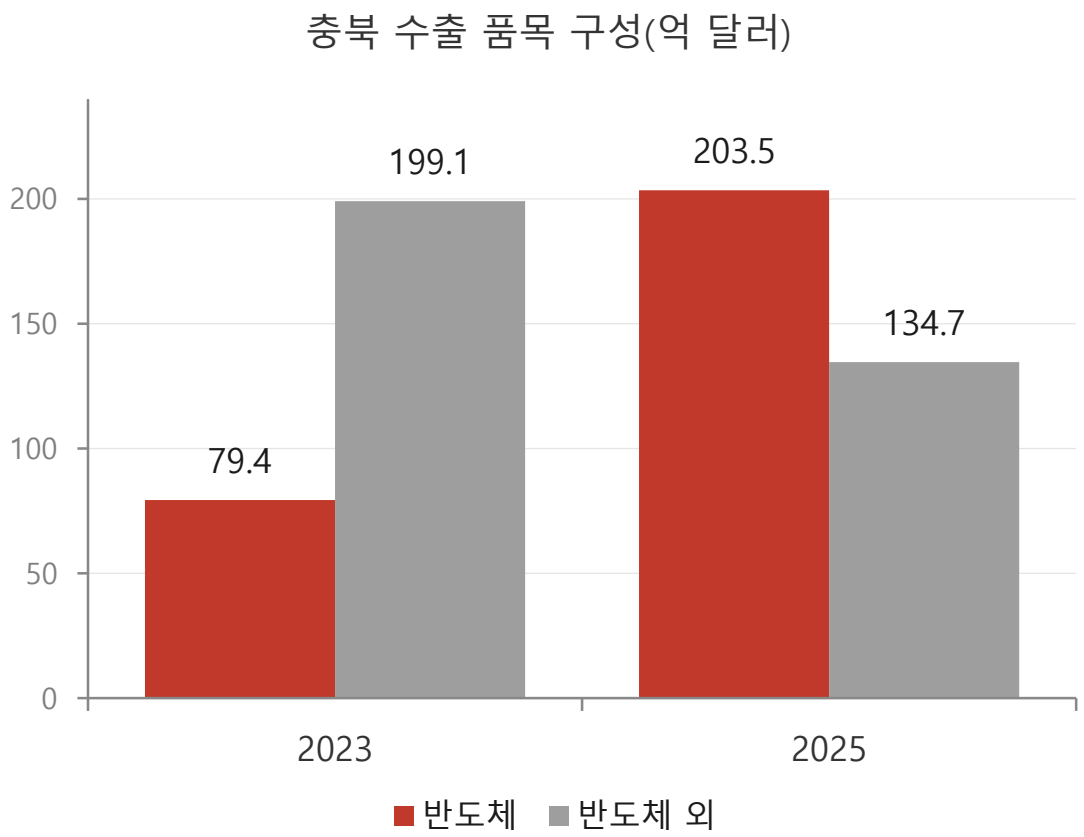
70.9%
같은 분기 반도체·전자부품
생산 증가율

13.6%
1분기 GRDP 증가율
(9월 수정치)

국가데이터처 2026년 2/4분기 2분기 지역경제동향

- 충북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음.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임.
- 성장은 광업·제조업이 이끌었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었음. 광공업 생산은 27.8% 늘었음.
- **그런데 이 성장은 업종·지역·기업 모두 한쪽에 쏠린 성장임. 다음 장에서 그 쏠림을 수출 구성으로 확인함.**

좁은 통로로만 흐르는 성장: 반도체가 다른 산업의 부진을 가렸음



- 2025년 충북 수출은 338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음. 그러나 반도체 비중이 60.2%까지 올랐음(2010년 30.5%).
- 2023~2025년 반도체 수출은 156.2% 늘었지만 반도체 외 수출은 32.4% 줄었음. 성장이 퍼진 것이 아니라 한 품목이 나머지의 부진을 가린 것임.
- 한국은행이 계산한 충북 수출집중도(HHI)는 3,689로 제주 다음으로 높음.
- **반도체 수출이 30% 줄면 충북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모형 결과도 있음. 호황의 크기만큼 불황의 낙폭도 커지는 구조임.**

생산 지표와 삶의 지표는 반대로 움직였음

소비자물가
2026년 5~9월 다섯 달 연속 3%대 상승

10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충북 −3.8p, 전국 +6.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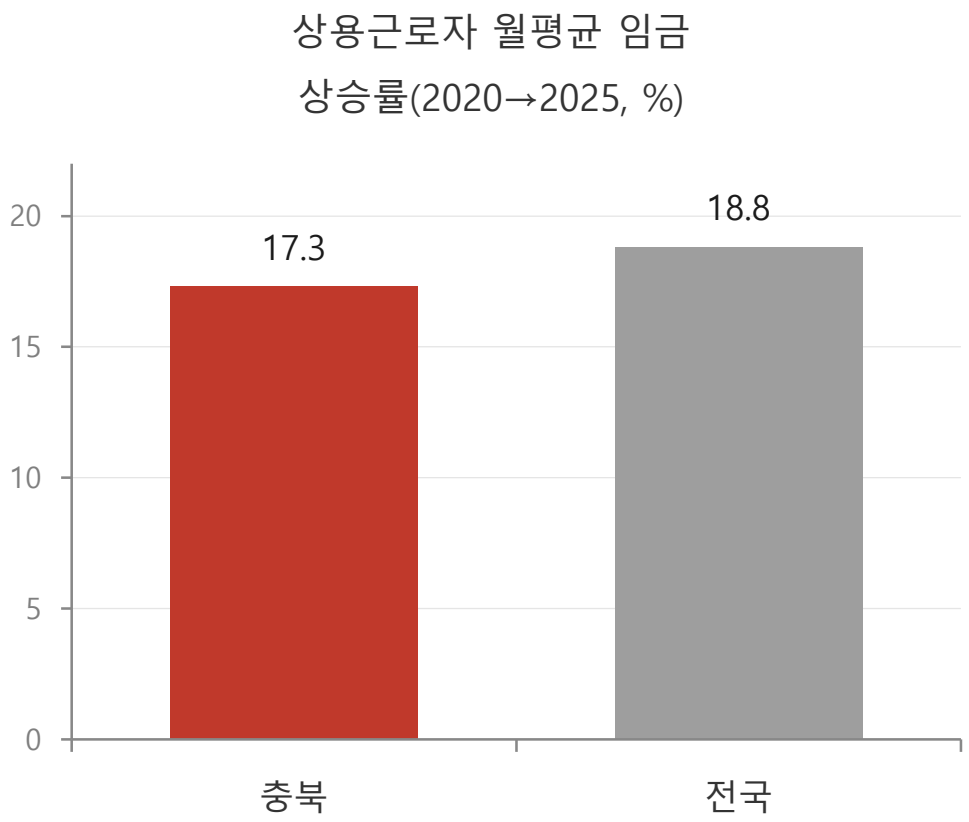
생산은 전국 1위로 늘었는데 물가는 오르고 지역 기업의 체감 경기는 오히려 나빠졌음. 반도체를 뺀 지역 제조업은 호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임. 이 간극에서 발표는 세 가지를 물었음.

- 반도체 산업과 산단 조성이 지역경제에 실제로 남긴 것은 무엇인가
- 기업 투자와 산업 유치가 노동자·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
- 청주·이천·구미의 경험과 특구 20년에 비추면 메가프로젝트는 무엇을 남길까

지역부정의: 이익은 어디에 쌓이고, 부담은 어디로 가는가

기후정의: 반도체 증설의 물·전기·온실가스 비용을 누가 치르는가

생산은 1위인데 임금 순위는 내려갔음



구분	2020년	2025년
충북 월평균 임금	320만 3,545원	375만 7,109원
17개 시·도 순위	10위	12위
전국 평균 대비	92.9%	91.8%

- 충북 월평균 임금: 320만 원(2020, 10위) → 376만 원(2025, 12위)
- 전국 평균 대비: 92.9% → 91.8%
-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2025년 매출 97조 1,467억 원, 영업이익 47조 2,063억 원**
- 2분기 고용률 67.5%(전국 63.2%)이지만, 3분기 취업자는 남 +7천·여 −8천으로 1년 전과 비슷. 고용은 생산만큼 늘지 않았음.(충북여성재단 통계브리프 20호 재인용)
- 등록공장 1만 500개 중 전자부품(반도체 포함)은 401개(3.8%)뿐. 도민 다수의 임금은 금속가공·식품·기계 같은 중소 제조업이 정함(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 2026년 6월 말).

생산과 이익이 가장 빨리 늘어난 충북 지역. 그런데 고용은 그만큼 늘지 않았고 임금 순위는 떨어졌음

100조 원 투자에 상주인력 5,341명

시설	원청	협력사	상주인력	근거
M17(낸드 전공정)	1,300명	1,041명	2,341명	시나리오(1,510~3,175명) 중앙값
P&T7(HBM 패키징)	1,646명	1,354명	3,000명	회사 발표(원청·협력사 구분은 추정)
합계	2,946명	2,395명	5,341명	

187억 원

상주인력 1명당 투자액

340억 원

원청 1명당 투자액(발표자 계산)

- 반도체는 투자액에 비해 일자리가 적은 산업임. 홍석만(참세상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청주 신규 투자(M17·P&T7)가 만드는 상시고용은 5,341명임. 이에 따르면 청주 투자 100조 원 기준으로 상시고용 1명당 약 187억 원, 원청 직접고용 1명당 약 340억 원이 든다는 분석
- 그마저 45%는 협력사 일자리이고, 기존 인력 전환배치와 외부 협력업체 파견을 고려하면 지역주민의 채용은 더 적을 것임.

- 건설 인력(P&T7 하루 최대 9,000명)은 공사가 끝나면 떠나는 일자리임

늘어난 몫은 지역 안에서 돌지 않고, 세수는 업황에 따라

29.6%

충북 생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이출 비중
17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높음

- 충북에서 만든 재화의 상당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나감. 생산이 늘어도 그 생산이 지역 안의 거래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몫이 작음.
-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혜 지역에서 늘어난 소비가 자동차·백화점·가전 같은 고가 재량소비재에 몰렸다고 분석했음. 골목 상권과 지역 서비스업으로 돈이 돌지 않았다는 뜻임.
- **<u>성과급이 남긴 대표적 흔적은 임금이 아니라 집값이었음. 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에게는 주거비 부담으로 돌아옴.</u>**



-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이 청주시에 낸 법인지방소득세는 2019년 1,818억 원이었지만, 적자 여파로 2024년에는 0원이었음.
- 2025년 1,219억 원으로 회복했고 2026년에는 3,700억 원여가 예상됨.
- 본사가 있는 이천시는 2026년 예상 지방세수 8,081억 원 중 약 76%가 지방소득세임.
- **<u>반도체 도시의 재정은 업황을 따라 출렁임. 불황이 오면 복지·돌봄·교통 같은 삶의 예산이 먼저 줄어듦.</u>**
  <u>메가프로젝트는 이 의존을 더 키움.</u>

땅은 남고 공장은 쉬고 있음

구분	수치
준공 산단	107곳(국가 1·일반 61·도시첨단 2·농공 43)
입주업체 중 청주	3,296개 중 1,372개(41.6%)
입주했지만 가동 안 하는 업체	312개(가동률 90.5%)
준공 산단 미분양	125만 9천㎡, 49.6%가 충주 두 곳
산단 밖 공장	등록공장의 73.3%(전국 60.9%)
관리지역 입지 공장	59.2%(전국 33.1%)
휴업 공장	130개, 17개 시·도 중 최다(음성 108개)

출처: 충청북도 산업단지현황(2026.6.30),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 공장등록통계(2026년 6월 말)

21곳

2025년 한 해 일반산단 지정계획(1,709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산단 포함하면 129곳.

130개

휴업중인 공장

공급이 수요를 앞서고, 공장은 관리지역 농지와 마을 사이로 흩어짐

- 산단과 공장 통계를 직접 다시 집계했음. 입주업체의 40% 이상이 청주에 몰려 있음.
- 충주의 동충주산단(분양률 50.2%)과 충주제5산단(3.0%)에 미분양의 절반이 몰려 있음.
- **충북 공장의 4분의 3은 계획입지 밖에 있고, 절반 이상이 관리지역의 농지·마을 사이에 흩어져 있음. 환경·안전 관리가 어려운 구조임.**

그런데도 산단은 계속 늘어남

21곳

2025년 한 해 일반산단 지정계획 고시
(1,709만㎡)

약 1,930만㎡

2022~2026년 신규 지정 면적
충북도는 " 전국 1위 " 라며 치적으로 생각.

아래의 흐름은 산단 설립이 삶이 미치는 영향

산업용지 공급이 수요보다 앞섬 ▶ **공장이 산단 밖 관리지역으로 흩어짐** ▶ **농지·임야가 빠르게 줄어듦** ▶ **환경·안전 관리와 주민 생활이 함께 나빠짐**

미분양과 휴업이 쌓이는데도 지정을 늘리는 것은 수요가 아니라 유치 실적을 기준으로 땅을 공급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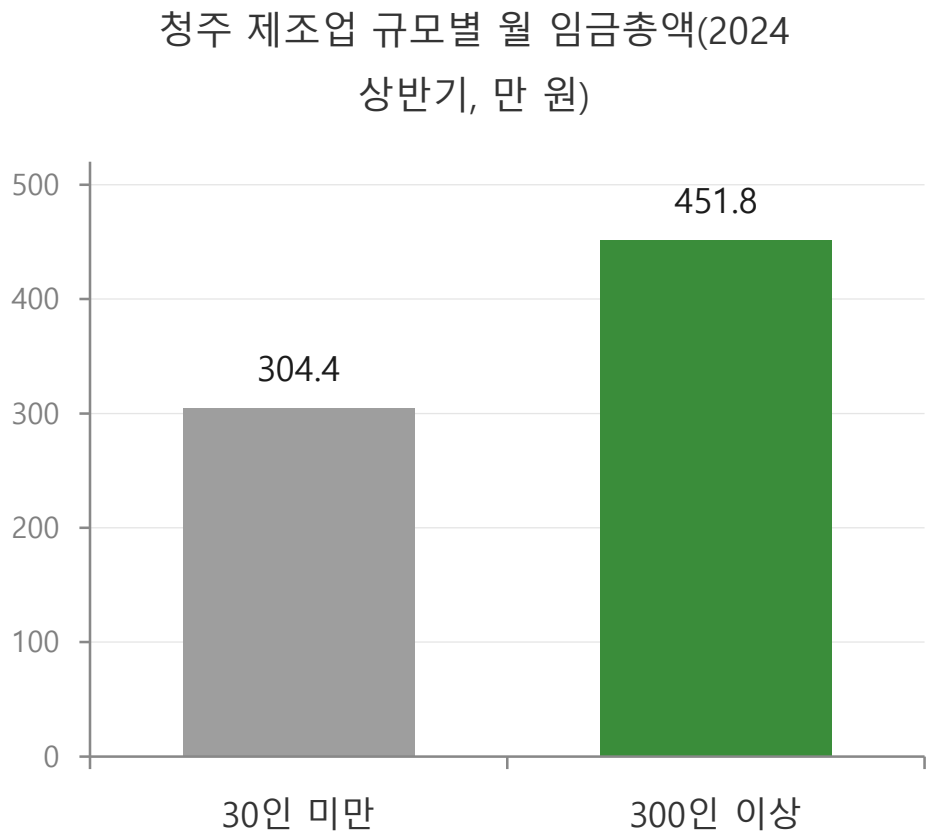
충북도 기업유치 20년: 협약액 경쟁의 누적

시기	핵심 내용
2004~200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제정(2004.11)·전문개정(2006.12)
민선 4기(정우택)	"경제특별도 충북", 취임 16개월여 만에 13조 원. 하이닉스 유치에 지사는 "천운"과 인맥 동원을 거론
민선 5~7기(이시종)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에 11년 4개월
민선 8기(김영환)	6개월 만에 26조 8천억 원. 보조금 1,530억→3,310억 원, 산업용지 연 330만㎡ 공급 계획. 2023.1 투자유치국 신설, 2024.11 기회발전특구. 2026.1 누적 83조 4천억 원
민선 9기(신용한)	SK하이닉스 100조 원(M17 80조+P&T7 20조)·셀트리온제약 2조 원 협약(7.2), 취임 100일 103조 7천억 원 발표(10.6)

- 성과가 실제인지 확인도 필요할 것이지만, 주목할 것은 정치권이 매번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
- 도의회 지적(2025·2026 행정사무감사): 이행률은 기업 수 기준, 실투자율 비공개, 착공 안 한 기업도 이행으로 집계. 고용도 대부분 협약 단계 숫자임. 도는 협약만 맺은 상태에서 고용성과를 발표함. 실제 숫자를 확인하기 쉽지 않음. 보조금이 환수된 기업도 존재(4곳)
- 민선8기 민관 TF가 풀 과제로 꼽은 것: 공업용수·대규모 전력·환경규제 완화

도정마다 투자유치 금액을 공약으로 걸었고, 금액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은 대기업의 대규모 단일 투자였음. 쏠림은 우연이 아니라 정책의 결과임.

같은 공장, 다른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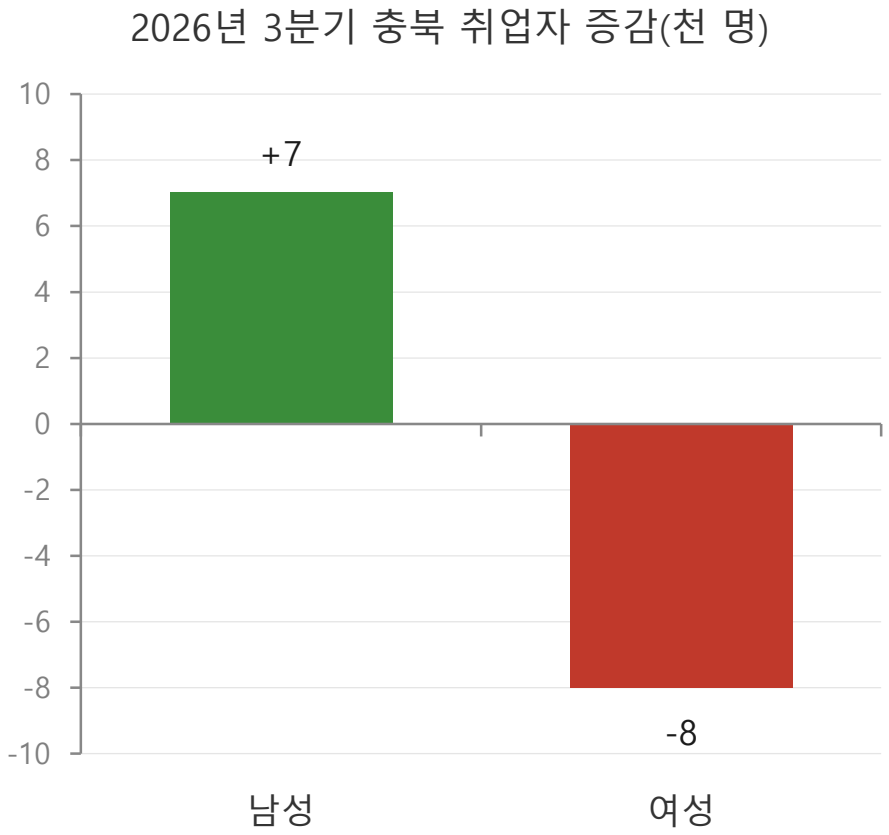
구분	연간 보수
SK하이닉스 직원 평균(2025)	1억 8,500만 원(1년 새 +58.1%)
청주공장 자재·운송 협력업체	3천만 원대 중반~4천만 원(교대·연장 포함)

- 청주 제조업 안에서도 30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월 임금 차이는 147만 원이 넘음. 반도체만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갈라진 지역 노동시장의 모습
- 원청 평균연봉이 지역 평균을 끌어올려도, 협력사·도급 노동자의 조건이 그대로면 불평등은 더 깊어짐.
- 2026년 4월 30일, SK하이닉스 제품을 운송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청주 3공장 앞에서 처음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했음. 원청 직원이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때 하청노동자는 500만~600만 원의 상생장려금을 받았음.
- SK하이닉스는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금속노조는 9월 SK서린빌딩 앞에서도 요구를 이어가고 있음

출처: 청주시정연구원(홍석만 발제문 재인용), SK하이닉스 2025 사업보고서(2026.3.17 공시

- **"양질의 일자리"는 원청 홍보 숫자가 아니라 원·하청 임금비, 성과급 공유, 계약기간으로 판단해야 함.**

남성 중심 일자리, 줄어드는 청년 여성 일자리



−12.8%

20대 여성 취업자(5만 명)
2015년 1분기 이후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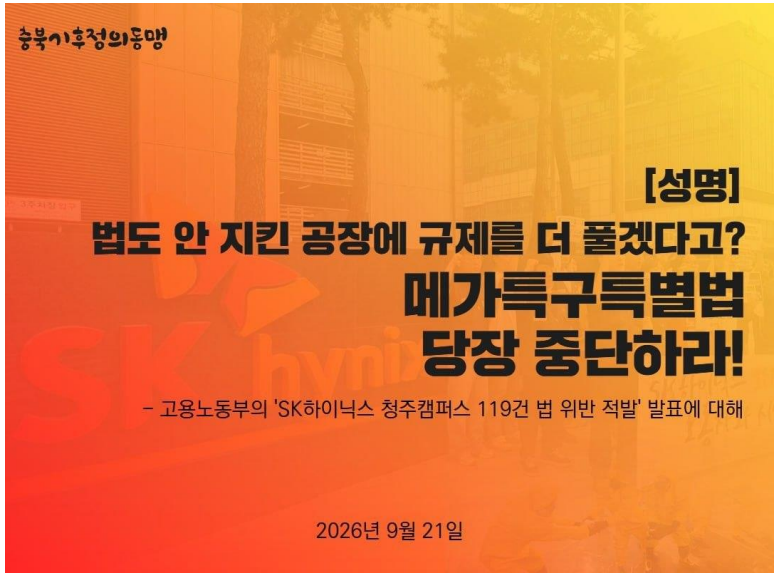
16.4%p

성별 고용률 격차
1년 새 1.3%p 확대

- 2025년 말 충북의 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20대 123.6명, 30대 124.0명임. 2026년 2분기 20대 순유입 936명 중 여성은 116명뿐이었음.
- 등록공장 종사자 24만 107명 가운데 여성은 25.9%임. 남성 중심 제조업을 키우는 전략은 청년 여성이 머물 자리를 만들지 못했음.
- **반도체 호황이 정점일 때 청년 여성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음. 어떤 일자리인지, 돌봄·의료·교통이 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함.**

출처: 충북여성재단「충북여성고용동향 2026년 3분기」(2026.10.29)

공장 곁의 위험



338건
반도체 사업장 2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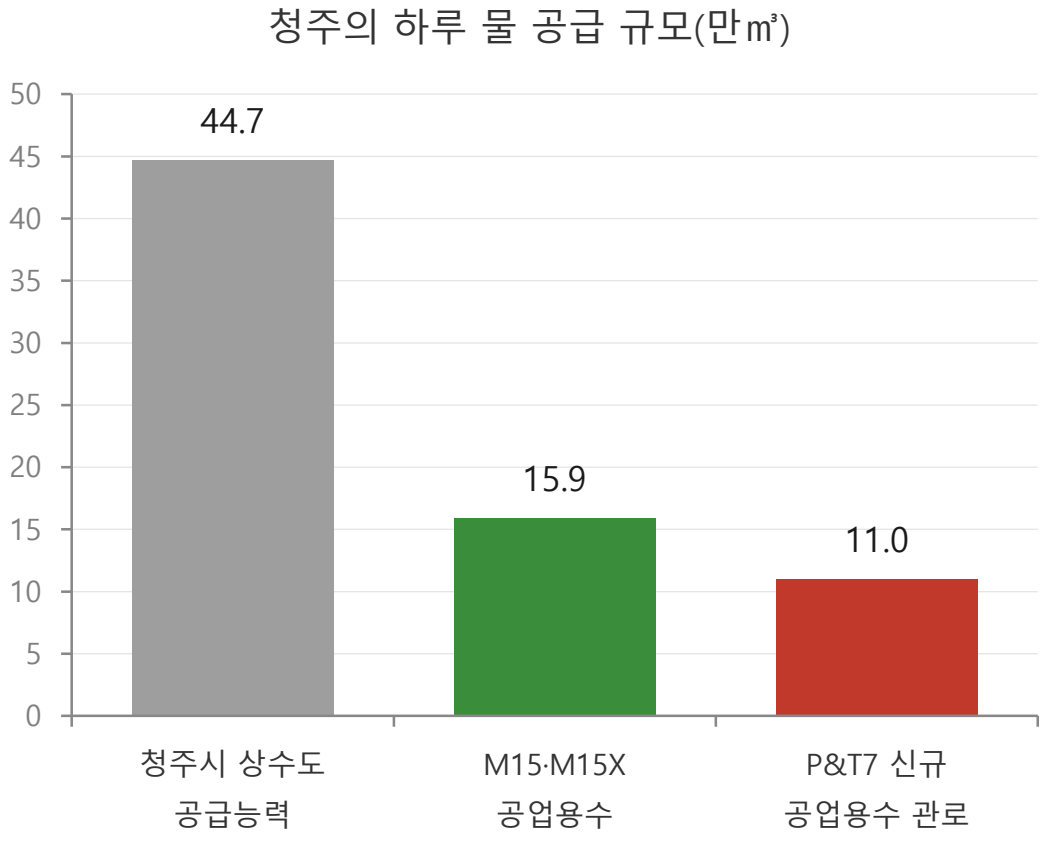
119건
그중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한 곳

1.12억 원
27곳 전체 과태료
(1억 1,200만 원)

- 2026년 6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누출·화재 사고가 잇따랐음. 고용노동부가 6월 26일~9월 18일 반도체 사업장을 점검했음.
- 청주에서는 사법처리 28건, 과태료 84건, 시정조치 7건이 나왔음. 안전밸브 앞뒤에 차단밸브를 달거나,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기기를 쓴 곳도 있었음.
- 공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지만, 누출 물질의 종류와 위험성은 주민과 하청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

같은 시기 정부는 인허가·환경영향평가를 줄이는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했음. 운영 단계의 안전 규정도 지키지 않는 공장에 건설 단계의 안전장치까지 덜어주는 꼴임.

물: 부족 전망과 공업용수 확대가 따로 움직임



출처: 충북도 수자원 관리계획(2026.6.18), 뉴스1(2026.6.30)

6,034만㎥

2035년 충북 연간 물 부족 전망
그 91.3%(5,507만㎥)가 청주

- 충북도 수자원 관리계획(2026.6.18 확정)은 2035년 물 부족의 대부분이 청주에서 생길 것으로 봤음.
- 그런데 청주시는 P&T7에 하루 11만㎥ 관로를 새로 놓고 있음. 청주시 상수도 공급능력의 약 24.6%에 해당하는 규모임. 여기에 M17이 더해짐.
- **관로 비용 278억 원은 기업이 내지만, 물의 총량과 가뭄 때 생활·농업·산업 중 누구를 먼저 제한할지는 지역이 떠안음.**
- 산단이 늘수록 산업폐기물 시설도 주변으로 감. 민간 소각장이 몰린 청주 북이면에는 산업용지 약 61만㎡가 또 분양을 기다리고 있음.
- 거점을 키우는 정책은 지역 안에서도 주변을 발전소·송전탑·소각장 부지로 동원함.
- **농촌은 성장의 혜택을 나눠 받는 곳이 아니라 땅·물·사람을 내주는 곳이 되고 있음.**

전기와 온실가스: 쓰는 곳이자 지나가는 곳

15.8%

충북 전력자립도(2024 잠정)
전국 최하위권

585MW

주민 반대 속 지은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499만 톤

SK하이닉스 온실가스 배출
(2023년 478만 톤 → 2025년)

7개 노선

345kV 송전선로
충북 10개 시·군 경과

노선(345kV)	충북 경과 지역(보도 기준)
신서원(신세종)~신진천	청주(현도·문의·남이·강내·오송·옥산·오창), 진천
신영주~신중부	충주, 음성, 괴산, 증평, 청주, 진천
신계룡~북천안 / 무주영동~신세종	청주·진천 / 영동·옥천·보은·청주
신원주~동용인 / 신평창~신원주 / 신장수~무주영동	충주·음성 / 제천 / 영동

충북은 쓰는 전기의 대부분을 다른 지역에 기댐. SK하이닉스는 자기 공장 전력을 위해 LNG 발전소를 지었고 온실가스 배출은 늘었음. 동시에 용인 반도체산단과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선로가 충북을 지남. 청주에는 세 노선이 겹침.

구미사례 : 생산은 돌아왔지만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았음

99.7%

2025 생산액 45조 4,988억 원
전성기(2014) 대비 회복률

출처: 매일신문(2026.6.14)

−21.3%

노동자 7만 5,591명
전성기보다 2만 952명 감소

64.3%

2026.3 평균 가동률
전국 34개 국가산단 중 33위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 업체의 90.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기업의 가동률은 51.88%에 머물렀음.
- 대기업 생산기지가 수도권·해외로 빠져나간 뒤 하청 소기업이 일감을 잃었고, 다시 들어온 투자는 사람을 덜 쓰는 설비였음.
- **한 업종·몇몇 대기업에 기대는 지역은 호황에도 "고용 없는 회복"을 겪음. 청주가 가는 길도 다르지 않음.**

이천 · 용인: 환경 부담은 농촌으로 번졌음

731mg/L
이천 죽당천 방류구 하류
염소이온 평균

1,561mg/L
같은 지점
황산이온 평균

36→48만 톤
용인 방류수 하루 방류량
확대 방안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26년 8~9월 SK하이닉스 이천 방류수가 흘러드는 죽당천을 조사했음. 국내 기준이 없는 두 물질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관개용수 권고 수준을 크게 웃돌았음.
- 용인 SK하이닉스 방류수는 한천을 거쳐 안성 농민의 농업용 저수지인 고삼저수지로 흘러들 예정임. 안성시는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밝혔고, 안성시의회는 직방류 철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 **청주 공장이 늘수록 같은 질문이 미호강과 그 주변 농경지로 돌아올 수 있음.**

특구 20년: 이름만 바뀌면서 특례를 키움

제도(도입)	핵심 수단	공간	결과
경제자유구역(2003)	외국인투자 감세·규제완화	지구	2014년 14개 지구 해제, 면적 22% 축소. 2013~14년 외국인 직접투자 중 경자구역 비중 9.1%
기업도시(2004)	민간 주도 도시개발	도시	6곳 중 2곳(원주·충주)만 준공
지역특화발전특구(2004)	129개 규제특례 중 선택	시·군 일부	"무늬만 특구" 지적. 성과 보통 165곳·부진 10곳
규제자유특구(2019)	실증특례·임시허가	광역 일부	실증 지연, 사업화 미흡
기회발전특구(2023)	법인세 5년 100%+2년 50%, 취득세 100% 감면 등	산단·개별입지	영남권 대기업에 투자 편중. 2014년 충북 4개 시군 지정 (제천, 진천, 보은, 음성)
초광역특구(2026.10 발의)	특별보조금·감세·인허가 의제·노동특례	초광역권	8장 264조. "기존 법률에도 불구하고" 172회

정부는 기존 특구가 "소규모 분산 지정, 부처별 칸막이, 공급자 중심 설계" 때문에 실패했다고 진단함. 그러나 처방은 평가가 아니라 더 큰 공간, 더 많은 특례였음.

충북이 겪은 특구: 경제자유구역의 실패

2013년 2월 오송 바이오밸리, 청주 에어로폴리스, 충주 에코폴리스 3개 지구(7.21㎢)가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음. 순항한 곳은 오송뿐이었음.

충주 에코폴리스

- 지구의 88%가 비행안전구역이었음
- "불리한 여건을 알았지만 신청부터 하고 대책은 나중에" (충주시 관계자)
- 입주 희망 기업 0곳, 강행 시 도·시 재정 부담 최대 2천억 원
- 2017년 4월 백지화

청주 에어로폴리스

- 항공정비(MRO)단지를 핵심으로 추진
- 아시아나항공이 사업을 포기한 뒤 2016년 12월 MRO 유치 포기
- 같은 날 이란 자본과 맺은 2조 원대 오송 투자 협약도 종료

지금은 기회발전특구와 SK하이닉스 100조 원 협약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음. 협약액은 성과로 발표하고, 실패는 지구 해제로 조용히 정리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음.

특구의 문제는 이렇게 이어져 왔음

① 실패를 평가하지 않음

경자구역은 장기 미개발로 주민 재산권 침해 민원이 커지자 지구를 대거 해제했음. 지역특구는 "무늬만 특구" 지적 속에 이름만 바뀌었음. 성과 평가가 다음 제도 설계로 이어진 적이 없음.

② 특례가 세금→규제→노동권으로

기회발전특구는 세금을,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풀었음. 초광역특구법은 여기에 노동시간·기간제·파견 특례를 얹었음.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처음으로 특례 대상이 됐음.

③ 공간은 커지고 결정권은 위로

지역특구는 기초단체가 특례를 골라 신청했음. 초광역특구는 산업부 전담조직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정함. 주민과 기초의회는 결정 구조에서 멀어짐.

④ 혜택은 기반 있는 곳으로

같은 혜택을 주면 산업 기반이 있는 곳과 대기업이 더 가져감. 기회발전특구 투자는 영남권 대기업에 몰렸음. 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결과가 어긋남.

초광역특구법 : 지역민의 삶에 무엇이 달라질까

영역	법안 내용	충북에서 이미 벌어지는 일
결정권	기업 제안 수용 의무(9조4항). 지방의회 의결·시군 동의·주민투표 없음	SK 100조 원 협약 뒤 도·시가 전담 TF를 꾸려 전력·용수·인허가를 챙김
땅	농업진흥지역·산림보호구역 해제 간주(20조), 농지전용 허가(89조), 산단 수요 확인 완화(38조)	2025년 농지·임야 감소, 준공 산단 미분양 125만 9천㎡
물	댐 기본계획 14일 협의 간주(43조), 물 사용권 수용 가능(180조)	2035년 연 6,034만㎥ 부족 전망, 91.3%가 청주
안전·알 권리	유해물질 대체 명칭 고지(138조), 화학사고예방계획 신속 처리(124조), 폐기물처리업 허가 면제(103조)	청주캠퍼스 산안법 위반 119건, 누출 물질 정보 미공개
공공서비스	외국 법인 병원·건강보험 밖 약국(61·62조), 교육 기준을 조례로(69·70·72조)	특구 안팎의 의료·교육 기준이 갈라질 우려
재정	특별보조금·투자보조금 우대(212·213조), 각종 부담금 감면(253조), 예타 단축·면제(34·198조), 수의계약(43조)	투자유치 보조금 1,530억→3,310억 원, 보조금 전액 환수 기업 4곳

혜택은 특구기업에, 결정은 중앙에, 땅·물·안전·재정의 비용은 지역민에게 돌아감. 충북이 이미 겪고 있는 문제를 법으로 굳히고 더 키우는 구조임.

일자리와 삶의 변화

영역	현재	특구법이 더하는 것	예상되는 변화
일자리 수	100조 원에 상주인력 5,341명, 1명당 187억 원. 3,000명도 순증고용 근거 없음	특별보조금·고용보조금 우대(212·227조)	보조금은 늘어도 일자리 수는 크게 늘지 않음. 1명당 공공지원액이 더 커짐
일자리 질	협력사 비중 45%, 자동화 뒤 44.5%. 협력업체 연봉은 원청 평균의 5분의 1 안팎	기간제 4년(134조), 파견 확대(77조), 근로시간 특례(132·133조)	새 일자리일수록 계약직·파견·장시간 일자리 비중이 커짐. 원·하청 격차가 법으로 굳어짐
청년 여성	3분기 여성 취업자 −8천 명, 20대 여성 −12.8%. 20대 성비 123.6	제조 특구에 자원 집중. 의료는 특례로 시장화, 교육은 지역마다 달라지는 상황(61·62·69조)	남성 중심 고용 구조가 더 강해짐. 돌봄·의료 일자리와 서비스가 따라오지 않으면 청년 여성 유출이 이어짐
주거·생활비	하이닉스 인근 아파트값 약 2억 원 상승, 물가 5개월 연속 3%대	도시혁신구역을 국토부가 지정(30조), 산단 상업용지 비율 완화(38조)	특구 주변 땅값·집값이 오르고, 혜택 밖의 주민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짐

흐름: 투자는 커지지만 일자리는 적고 불안정해지며, 그 차이를 보조금과 집값이 메우는 구조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음.

삶터와 민주주의 변화

영역	현재	특구법이 더하는 것	예상되는 변화
땅	농지·임야 1년에 −9.6㎢, 미분양 125만 9천㎡, 휴업공장 130개(전국 최다)	보호구역 해제 간주(20조), 수요 확인 완화(38조), 농지전용(89조)	농지·산림이 더 빨리 줄고, 수요 없는 산단이 늘어 미분양과 재정 부담이 커짐
물	2035년 연 6,034만㎥ 부족 전망, 91.3%가 청주. P&T7 관로만 상수도 능력의 24.6%	댐 협의 14일 간주(43조), 물 사용권 수용(180조)	가뭄 때 공업용수와 농업·생활용수의 갈등이 커지고, 새 댐·취수원 계획이 짧은 협의로 추진될 수 있음
전기·기후	전력자립도 15.8%, LNG 585MW, SK하이닉스 배출 499만 톤, 송전선로 7개 노선	대규모 전력 시설 평가 간소화(162조), 전력 부담금 감면(131조), 감축 의무 없음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LNG·송전선로 같은 시설과 그 갈등이 충북 곳곳으로 퍼짐
안전	청주캠퍼스 산안법 위반 119건, 과태료는 27곳 합쳐 1억 1,200만 원	유해물질 대체 명칭(138조), 안전심사 단축(137조), 폐기물 허가 면제(103조)	사고 위험은 커지는데 주민과 하청노동자가 아는 정보는 줄어듦
결정권	협약액 경쟁, 이중 집계 의혹, 도의회 지적에도 실투자 비공개	기업 제안 수용 의무(9조), 중앙 위원회 결정, 지방의회·주민투표 없음	지역 정치가 기업 유치의 창구가 되고, 주민과 의회의 견제는 더 약해짐

땅·물·전기·안전의 비용은 지역에 쌓이고, 그 비용을 따질 절차와 권한은 사라짐. 갈등은 늘어나는데 갈등을 풀 통로는 좁아짐.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지역민의 삶은?

지금까지의 변화는 호황기의 모습임.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산업이고, 충북은 이미 그 낙폭을 겪었음. 특구법으로 의존이 더 깊어진 뒤 업황이 꺾이면 충격도 더 커짐.

이미 겪은 일

- 2024년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법인지방소득세 0원(2019년 1,818억 원)
- 구미: 생산은 회복했지만 노동자는 전성기보다 21.3% 적고, 가동률은 34개 국가산단 중 33위
- 휴업 공장 130개, 전국 최다

경고된 일

- 충북 수출의 60.2%가 반도체, 수출집중도 HHI 3,689(제주 다음)
- 반도체 수출이 30% 줄면 충북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 모형 결과
- 세계적으로 반도체 과잉생산과 경쟁 과열 우려

특구법 뒤 예상되는 일

- 보조금·감면으로 지자체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세수가 급감함
- 복지·돌봄·교통 같은 삶의 예산이 먼저 깎임
- 불안정 고용이 많을수록 계약 해지·파견 종료로 충격이 하청과 지역 노동자에게 먼저 감
- 빈 산단과 훼손된 농지·산림은 되돌리기 어려움
- 기후위기 대응의 시기를 놓치고, 그 책임은 지역민에게

결론.

반도체 호황은 충북에 전국 1위 성장률을 남겼음. 그러나 그 비용은 하청노동자·청년 여성·농민, 공장과 송전탑 곁 주민이 치르고 있음.

20년 동안 특구와 협약액은 이름만 바꿔 반복됐고, 실패는 평가되지 않았음. 초광역특구법은 그 흐름의 끝에서 노동권과 주민의 알 권리, 지역의 결정권까지 특례 대상으로 올렸음.

초광역특구법으로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위계가 '(성장)거점 대 주변'으로 다시 만들어짐. 광역 거점에 특구가 몰리고, 농산어촌은 그 산업에 땅·물·전기를 대는 곳이 됨. 지역소멸의 위기 대책이 될 수 없음.

물어야 할 것은 얼마를 유치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고, 누가 누리고, 누가 감당하는지임
초광역특구법이 초래할 결과는 명백.

광주형 일자리에서부터 메가프로젝트까지

: 노동권과 생태 한계선이 부재한 '일자리'

손어진 (광주녹색당)

지난 10월 28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박근서 지부장이 18일 간의 단식 농성을 끝냈다. 이날 노사 집중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하고, 11월 5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설립되고 난 후 7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체결된, 2024년 GGM 내 최초 노조인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 설립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체결된 첫 단체협약이었다.

협약에는 노조할 권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타임오프 2,700시간과 사내 노조 사무실을 확보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부터 설과 추석 귀향비와 하계 휴가비 90만 원 인상, 상생지원금 50만 원 지급, 상생협력기여금 기준 일부도 개선되었다. 상생지원금과 상생협력기여금이란 개념이 등장한 광주글로벌모터스, 국내 첫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4대 의제(①적정 임금, ②적정 노동시간, ③노사 책임 경영, ④원하청 관계 개선)를 어렵게 끌어낸 광주형 일자리도 노동권이 지켜지는 일자리가 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정부가 강행하는 메가프로젝트는 그보다 더 심각한 질 낮은 일자리가 될 것이며, 생태 한계선을 고려하지 않은 반기후적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사업 계획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발표문은 작년 8월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열린 <청년상생일자리 확대·지속을 위한 토론회 – 광주형일자리를 중심으로–> 자료의 내용을 주로 참고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무노조, 무교섭, 무파업'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을 내세워 사실상 무(無)노조 경영을 지향한 일자리 모델이었다. 2019년 9월,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설립했다. GGM 설립 초기부터 누적 생산량 35만 대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무노조, 무교섭, 무파업' 사업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이는 법인 설립에 앞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체결한 투자협약과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그 배경이 있다. 당시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구상은 다음과 같았다.

"기업은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동종 업종과의 임금 격차는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교통·의료·문화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임금'으로 보완한다." 이 구상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적용 기한은 누적 생산량 35만 대를 달성할 때까지로 설정되었다.

처음 고용된 555명의 기술직 노동자는 대부분 전남광주 지역의 20~30대 남성 청년이었다. 2019년 상생협정서에 나온 평균 초임 연봉 주 44시간 기준 3천500만 원이었다. 거

기에 회사가 지급하는 격려금, 시가 지원해 준다는 상생지원금(주거비 20만 원)이 더해졌다.
2026년 7월 기준, GGM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739명, 20~30대가 82%, 전남광주 출신이 96%이다. 올해 주 49시간 근무 기준 기술직 평균 연봉은 4천9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잔업과 토요일 특근이 반영된 비용이고, 회사가 주는 상생협력기여금(출근 일수, 잔업·특근 참여율로 차등 지급), 광주시가 제공하는 상생지원금(주거지원비 30만 원, 문화상품권 연 15만 원, 2년에 1회 건강검진권)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니 상생협력기여금과 상생지원금을 제외하면 회사가 주는 기본급은 여전히 시급이 11,000원으로, 주 44시간 기준으로 하면 연봉 3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김승원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2025).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노조가 요구하는 "주간 2교대 추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고, 누적 생산 35만 대 이후 성장전략 마련이라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35만 대 누적 생산 목표는 어디까지 왔을까? 현재 GGM이 생산하는 차종은 소형 SUV 캐스퍼로 전량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있다. 교대 없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8시간 근무 체제이고, 화·목 연장근무(잔업)와 주말 특근 등이 진행되고 있다.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7월 기준)
노동자수	약 550		약 660		약 700	739
목표대수	12,000	50,000	45,000	50,000	58,200	61,200
생산대수	12,353	50,000	45,000	53,029 (내연: 31,233 전기: 21,796)	58,400	약 31,404
누적	**250,186** (2026.7월 기준, 내연: 152,647대, 전기: 97,539)					

GGM 생산 현황 (참고: 박상훈 2024, 국회미래연구원, 기사 검색)

2021년 첫해에는 9월 이후 3개월 동안 1만 2,353대를 생산했고, 2022년부터는 한해 약 5만 대씩 생산하고 있다. 내연기기관 캐스퍼만 생산해 왔던 것에서 2024년 7월부터는 경형 전기차량인 캐스퍼 EV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약 6만 대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지난 7월 캐스퍼 양산 4년 10개월 만에 누적 생산 25만 대를 넘었다. 연말에는 누적 생산 28만 대, 2028년 초에 누적 생산 35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시간당 22대 생산을 했다면, 지금은 시간당 29.5대이다. 하루에 약 240대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실제 노동조건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동종 업계의 절반도 안 되는 저임금, 작업 투입률 90%를 상회하는 노동강도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만과 이직률이 높고, 산단 내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동 복지 프로그램은 1,200억 원 가까이 지출하고도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고, 노사민정협의회

는 사회적 대화도, 협의 및 심의 기관도 아닌 하나의 형식으로 기능했고, 결국 상생도 동반도 실체가 없는 무권리 일자리에 가까운 광주형이 됐다는 중간 평가가 있다(박상훈, 2024).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작성할 당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노사민정협의회에 불참했던 결정, 35만 대 생산 시점까지 '무노조, 무교섭, 무파업'이라는 있지도 않은 반헌법적 합의를 근거로 2024년 7월 금속노조 소속으로 글로벌모터스지회 노조가 창립되자 광주시와 지역 언론까지 가세해 조리돌림 수준으로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것, 정관상 내부 임원은 노사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지만, GGM 중 노동계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점, 결국 GGM은 현대차의 하청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있다(김다정, 정준현, 김승원 2025).

김승원 GGM 노동자는 '노사상생'이라는 구호 뒤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2021년 입사 면접에서 받은 첫 질문은 "노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할 겁니까?"였다. 법정 최저임금과 다른 사업장의 최저시급은 해마다 인상되는 반면, GGM의 최저시급은 2년에 한 번 인상되고, 4년을 근속해야 월 2만 원의 직능수당이 신설되는 임금체계 역시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노동조합 결성 이후에는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징계와 보직 해임, 노조 홍보물 무단 철거, 노조 가입에 따른 전환배치 협박과 탈퇴 회유 등 노조 탄압이 이어졌다. 기존에 정액으로 지급하던 격려금은 '상생협력기여금'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파업이나 잔업·특근 거부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육아휴직자 역시 기여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연장근무를 거부하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휴대전화 수거와 같은 군대식 현장 통제,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속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항은 결국 퇴사와 이직이다. 실제로 2021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3년 동안 퇴직한 노동자는 360명에 이른다. 남은 노동자도 기아차나 현대차, 부품사 1차 업체로 가는 경력 쌓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일자리를 통해, 광주의 지역경제는 얼마나 활성화 되었을까? 이러한 일자리라도 청년들이 광주로 이주해오거나, 광주를 떠나지 않았을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제대로된 검증이 불가하고, 광주의 청년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다.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입	68,276	67,141	67,145	61,147	54,897	56,185
전출	70,786	76,994	66,967	64,018	64,142	64,105
순유출	-2,510	-9,853	178 (여성: 681 남성: -503)	-2,871	-9,245	-7,920

광주지역 청년(19~39세) 전·입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광주형 일자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김승원 노동자는 가장 먼저 노동조합을 상생 주체로 인정하고 노사 책임경영,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상생협력기여금, 상

생지원금, 승진, 직능수당 차등 적용 등을 이용해 주 52시간이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지 말고, 인원 충원을 통한 2교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현 연 5만 대 수준을 10만 대로 확대하고, 이후 지속적 안정성을 위해 15만 대 생산 체계를 갖추고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 당장 2교대를 시행하면 3백여 명의 청년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부품사 고용 확대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아 광주공장에서 현재 약 5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23년 53만1,100대, 24년 51만3,782대, 25년 52만 2,268대), GGM이 연간 30만 대 생산 체제로 성장한다면 광주는 연 100만 대 자동차 생산도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런데, 광주는 정말 연 100만 대 자동차 생산도시가 되어야만 할까? 한국은 아직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이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정책과 목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840만~890만 대 이상 보급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나, 내연자동차 생산과 판매 금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공급은 기존 차 생산에 추가 생산을 더 할 뿐이다.

작년 유럽연합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목표를 철회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유럽연합 역내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다. 많은 국가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줄이지 않고,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수소차 생산도 함께 늘고 자동차 주행 인구가 많아진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막겠다는 목표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광주청년유니온 김다정 위원장이 제시한 내용이 반갑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기존 지역 소재 일자리에도 4대 원칙(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상생협력, 노사 책임경영)이 실현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퇴출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대안에너지를 활용한 차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또한 녹색전환의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계획해야 한다. 산단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탄소 배출 저감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만들 것, 결국 광주형 일자리에 있어 공장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 보전과 에너지 절감의 노력을 통한 녹색전환의 공장이 되는 플랜을 필수로 담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현재 GGM 생산직 노동자 가운데 여성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성평등한 일자리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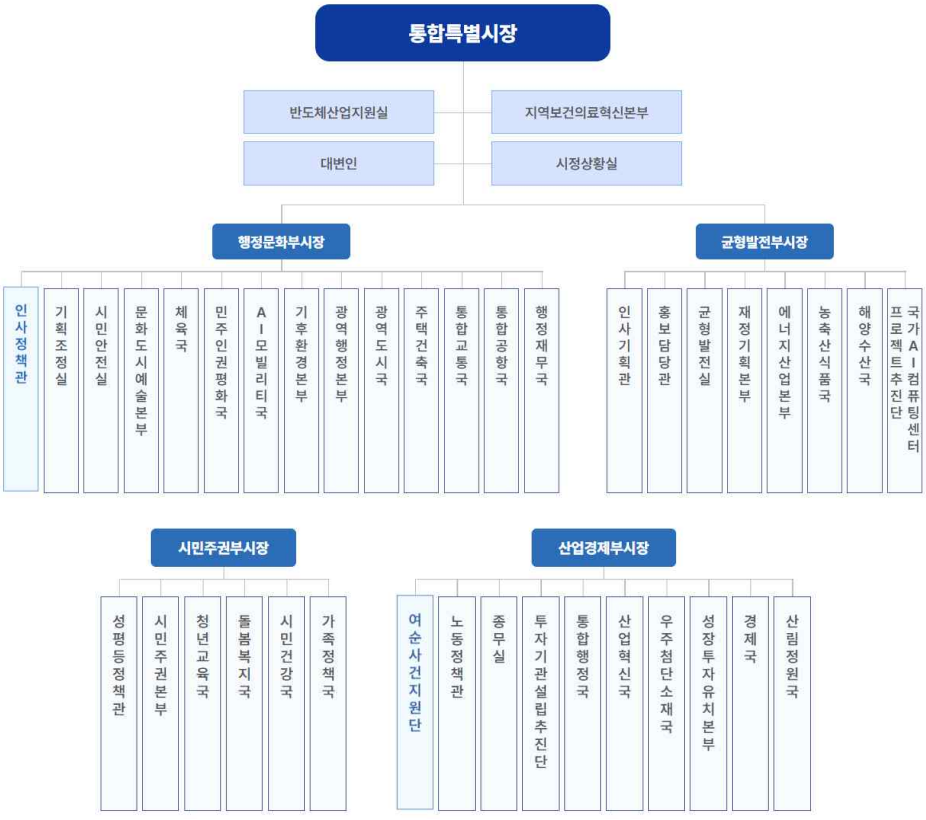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 2만 명~12만 명?

지난 7월 광주시의회에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물과 전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과 이것을 어떻게 다 충당, 충원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한 발제자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800조 원 규모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가정 아래, 연간 1만

2,500명, 10년간 12만 5천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전남과 광주의 고교와 대학을 합쳐 연간 2천 명 안팎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10년간 2만 4,500명), 앞으로 고졸, 전문대졸, 대졸·학사, 석·박사를 연간 6,300명, 10년간 6만 3천 명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다른 발제자는 반도체 공장 고용인력을 1기 가동 시 3천~5천 명으로, 4기 가동시 1만 2천~2만 명으로 잡았다.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춘 첨단 생태계 조성 목적의 고품격 복합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개발과 보전의 상생을 위해 팝은 북측 유휴지에 고밀 배치하고, 저습지는 생태 완충 녹지로 보존하며 방류수 순환을 위한 '세계 최초 습지 공존형 RE100 캠퍼스'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기와 물 전문가들이 노후핵발전소 계속 운전,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하수 방류수로 100%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보다, 이 두 발제자의 인력 예측과 확보 방안, 정주 여건이 더 허망하게 들렸다. 어쩌면 첨단 산업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거라는 희망을 갖고 예측한 학자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반도체 산단 운영과 이에 필요한 산업 인력, 필요한 인프라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메가프로젝트가 기존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를 딛고,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지금 추진되는 메가프로젝트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과 같은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형 일자리에서 드러났던 노동권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초광역 특구법은 기업의 투자와 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법적 규제를 광범위하게 완화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비용은 지역사회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업이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무엇보다 노동권과 산업안전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 연장과 장시간 노동 가능성,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놓고, 특히 유해화학물질 이름을 대체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 건강권, 환경 감시 기능 활동이 침해 될 것도 우려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2014년 민선 6기 광주시의 핵심 사업으로 출발했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온 인사들이 사업을 이끌었다. 그 과정에서 마련된 사회적 협약의 4대 의제는 ① 적정 임금, ② 적정 노동시간, ③ 노사 책임 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이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약속조차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메가프로젝트에서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사업에 참여할 대기업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요구하려는 의지 없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 산단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면, 시장 직속으로 반도체산업지원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에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구상할 수 있는 노동·일자리 전담 조직부터 마련했을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도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수백조 원의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반복된다. 그러나 800조 원이 투자된다는 반도체 팹 4기 건설 계획에서 정작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장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하루 몇 시간 동안 일하고, 얼마의 임금을 받으며,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도 보이지 않는다. 공장에 필요한 막대한 물과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의 주민들, 송전선로가 지나갈 마을과 개발로 훼손될 수 있는 습지의 생명들 역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광주가 더 많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생산하는 도시가 되는 것보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무조건 없애자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보다 우선은 이 지역의 GGM 청년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어떤 산업이 필요한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는 것일 것이다.

생산과 성장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생태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고 있는지, 개발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생명들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생태적 한계선은 어디까지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 질문을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스스로 요구하며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질문을 기업에 물어야 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 이 질문을 묻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더 읽어볼 자료:

김강열, 이순형, 손윤철, 조진상(2026) “통합시민이 그리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지역의 미래”
정준현, 김다정, 오주섭, 김승원, 채은지(2025) “청년상생형일자리 확대·지속을 위한 토론회 –광주형일자리를 중심으로–”
김현미, 신효은, 최다해, 최용근, 임동헌(2025) “2025년 광주광역시 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 실패 포럼”
박상훈(2024)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

3대 메가프로젝트와 불평등의 역설

: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 기업형 첨단도시 개발사업이 초래할 불평등

2026.11.12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메가프로젝트로 '황금시대'?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Golden Age)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메가프로젝트)속도전을 넘어 전격전 치러야" _ 이재명 대통령, 26.08,10.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 이재명 정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大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기조로, 국가주도 **'성장'전략에 방점**
  -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 AI 3대 강국 도약,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대 강국 도약, 바이오산업 육성 등 **AI·신산업 집중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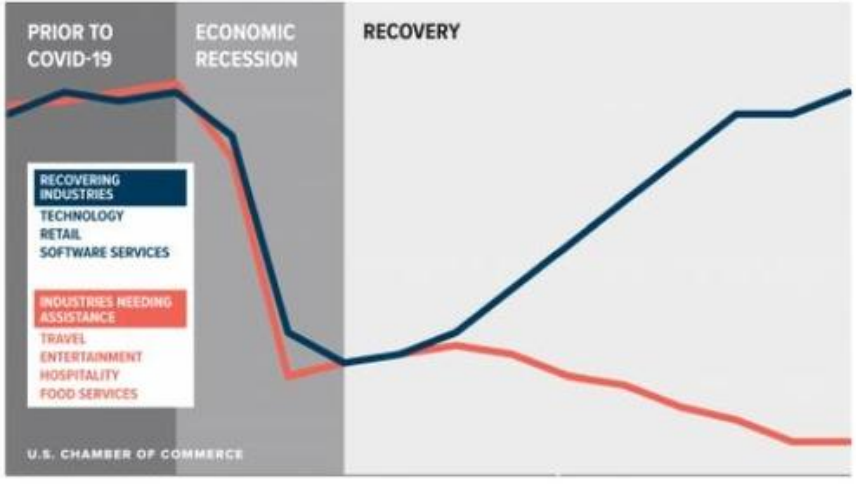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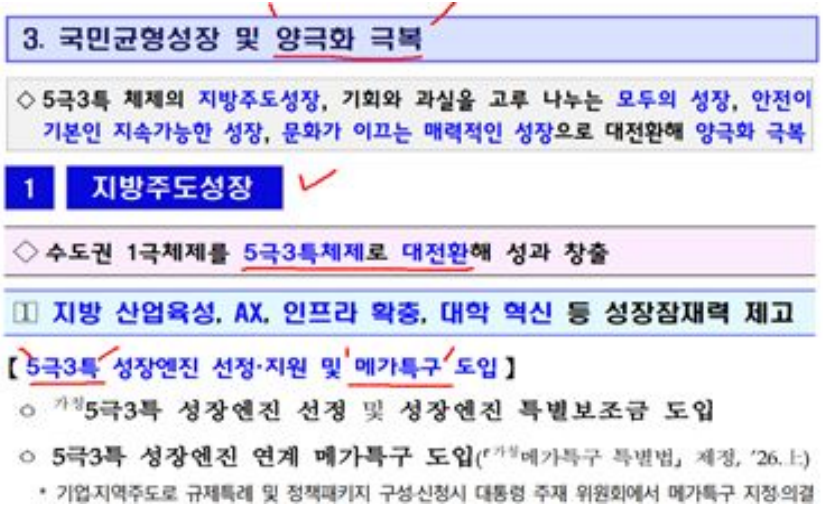


K자형 성장, 불평등의 해법으로 제시된 메가프로젝트?

- 정부가 진단한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저성장과 **'양극화(K자형 성장) 심화'**. 그러나, 양극화 해소 해법은 철저히 **'성장 중심'기조에 매몰**되어 있음
- K자형 양극화**(불평등) 극복의 해법**을 사회복지·재분배등 공공성 강화가 아닌 **'자본 유치 중심의 거점 집중 (5극3특, 메가프로젝트 거점) 강화'** 전략으로 제시
  - 지방주도 성장 전략이 서울 1극 체제의 지역간 불균등 문제에 대한 발전주의적 해법 일 수는 있어도, 불평등 심화의 근본적 해법은 아님. 오히려 자본집약적 성장모델이자 자산소유자 중심의 성장모델로 소득·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큼



코로나이전 - 경기침체 - K자형 회복(미 상공회의소)


3.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 5극3특 체제의 지방주도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해 양극화 극복

1 지방주도성장

◇ 수도권 1극체제를 5극3특체제로 대전환해 성과 창출

① 지방 산업육성, AX, 인프라 확충, 대학 혁신 등 성장잠재력 제고

【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지원 및 메가특구 도입 】

○ 가칭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및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

○ 5극3특 성장엔진 연계 메가특구 도입(「가칭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26. 上)

* 기업지역주도로 규제특례 및 정책패키지 구성신청시 대통령 주재 위원회에서 메가특구 지정의결

<2026년 경제성장전략> 양극화 극복 분야 (관계부처 합동, 2026.1.9.)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기업형첨단도시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핵심 인프라로 △**'전기국가(전력·용수 공급)'**와 △**'기업형첨단도시'** 조성 제시
-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전력·용수·교통·입지와 결합하고, 이를 수용할 **공간적 기반** 으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는 구상임. 자본과 인재가 선순환하는 완벽한 첨단도시라는 장밋빛 약속
  -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기업 맞춤형 입지공급)"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입지 공급
  - **산업단지**를 넘어 **특구, 신도시**가 연결된 **복합타운**(정주·문화·교육·의료 등 결합)을 조성. 이를 위해 각종 **도시계획·토지이용 규제 등 대폭 완화**와 맞춤형 **특례 지원**을 계획함
  - 해당 **기업**이 희망할 경우 **사업 시행·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첨단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인프라 ② : 기업형첨단도시 조성방안

◈ 글로벌 첨단산업 1번지이자,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신속 지원하고 기업·인재가 선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갖춘 "기업형첨단도시" 조성

1 기업형첨단도시 필요성

□ 기업이 원하는 대규모 입지 공급을 위해 **지역거점 조성이 필요**하나, **기존 공급자 중심의 先조성·後분양 체계로는 맞춤형 공급에 한계**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발표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6.6.29.)



<3대 메가프로젝트> 기업형 첨단도시 구축 개념도

부동산 호재로 읽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기업형첨단도시

- **'반세권', '셔세권'** 등 신조어와 함께 **메가프로젝트 대상지의 부동산 급등 기대** 형성

- [뉴시스]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지방 부동산 시장 꿈틀**.... **광주·나주 집값 반등**…시장 기대감 확산
- [뉴스1] 800조 메가프로젝트에 **광주 '꿈틀'... 부동산**.건설업계 '촉각'
- [세계비즈] 3대 메가프로젝트, **'반세권'호제 온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 불어넣나
- [한국일보] '**제2의 동탄**' 재현될까… AI·반도체 거점에 **지방 부동산 '꿈틀'**
- [서울경제] **광주** 첨단3지구 **'마피' 사라져**...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 건설 부동산시장**에도 활기
- [중기이코노미] 3대 메가프로젝트가 부동산시장 지도를 바꿀까
- [M이코노미] **반도체 기대** 품은 광주... **분양시장 온기**
- [이투데이] 반도체·AI 투자에 **기업형첨단도시까지**…지**방 부동산 회복 '마중물'** 기대
- [대한경제] **지방 도시정비시장**도 '메가프로젝트 효과'
- [데일리안]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지방 주택시장 촉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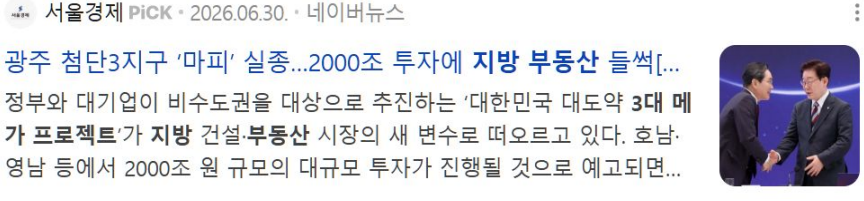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국민보고회) 직후, 부동산 호재로 읽는 언론보도들>


사회 최신뉴스 | 사건/사고 | 교육/학교 | 교통/지역 | 인권/복지 | 여성/노동 | 환경 | 미디어 |

[3대 메가프로젝트 대해부] '반세권' 호재 온다...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 불어넣나

세계일보 원문 | 기사전송 2026-07-01 13:35

AI챗으로 요약


서울경제 PiCK · 2026.06.30. · 네이버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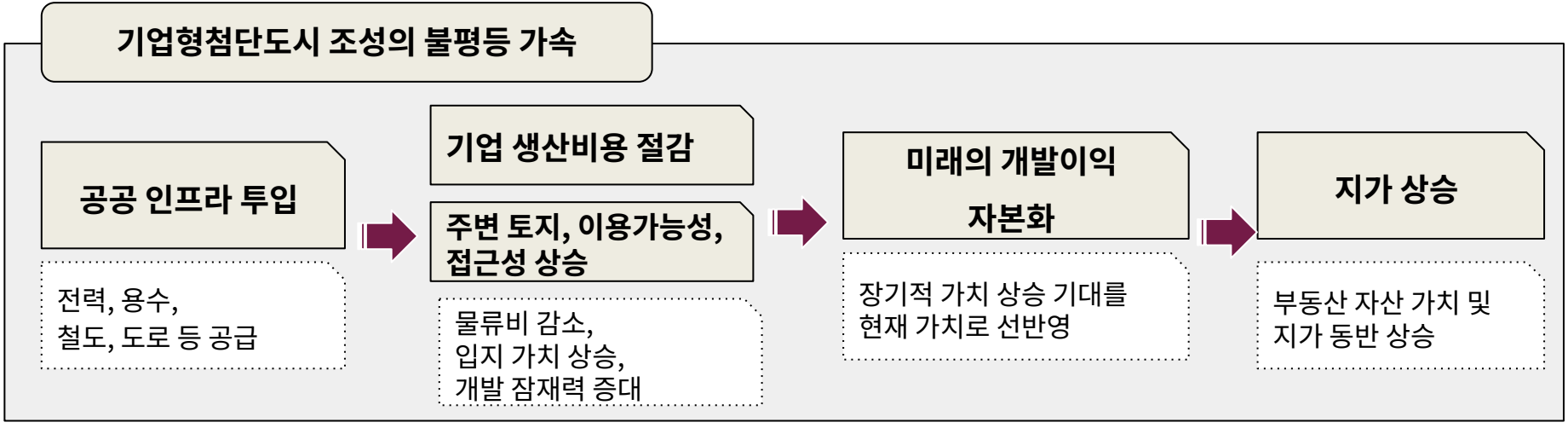
광주 첨단3지구 '마피' 실종...2000조 투자에 **지방 부동산** 들썩[...

정부와 대기업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방** 건설·**부동산**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호남·영남 등에서 20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고되면...

기업이 원하는 도시,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 기업형첨단도시로 지역균형발전? 불평등 가속엔진!!

- 기업도시, 산업특구, 기업혁신파크, 기업형첨단도시….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한 **전형적 자본집약적 거점개발 모델**
  - 대규모 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방식, 이를 통한 불평등 완화 주장은 이미 **실패를 증명한 낙수효과의 환상을 반복**하는 것
- 메가 **도시개발**에 정부가 전력·용수·철도·도로 등의 **공공 인프라 투입 >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주변 **토지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여 **미래의 개발이익까지 자본화 >** 일대의 **토지·주택 가격을 상승**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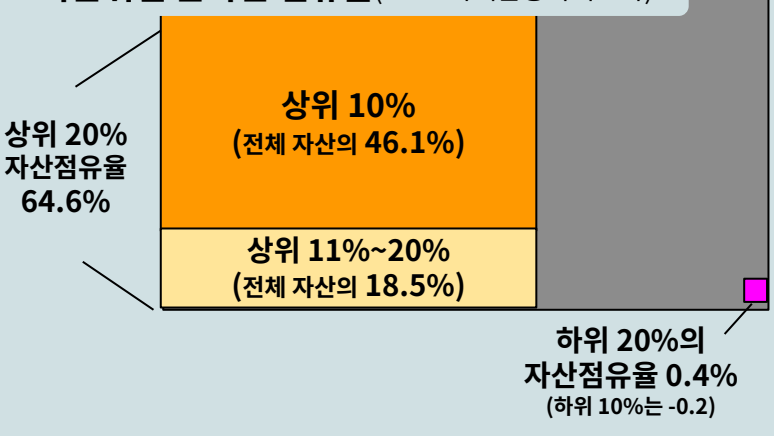
기업이 원하는 도시,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 물, 전기, 토지 등 지역 착취를 통한 기업 이익 극대화라는 문제와 함께 **대규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대 상승분**이 **토지·자산을 보유한 계층에게 귀속**되어 자산 불평등 악화를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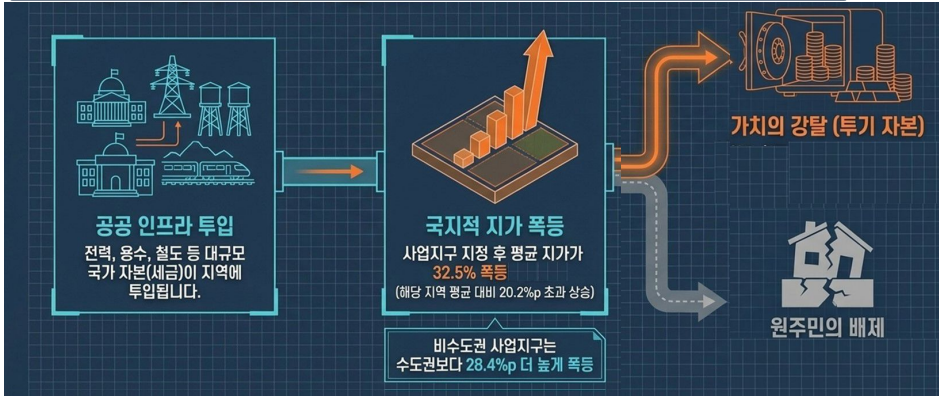
- **자산 불평등 지수**(순자산 지니계수 0.625)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 상위 10% 자산점유율** 전체 자산의 **46.1%** (자산 중 부동산 비율 71%)

- **지역현안 사업지구 개발 사업(14개 지구) 지가 분석**(국토연구원,2019)
  - 지구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32.5% 지가 상승(해당 지역 평균보다 20.2%p 높은 상승). 주변 1.5㎞의 개발제한구역도 26.4% 상승
  - 특히 비수도권 사업지구의 지가상승률이 수도권보다 28.4%p 높게 나타남. 지방에 대규모 첨단도시가 들어서는 경우에 상당한 국지적 토지가격 충격 발생

소득분위별 순자산 점유율(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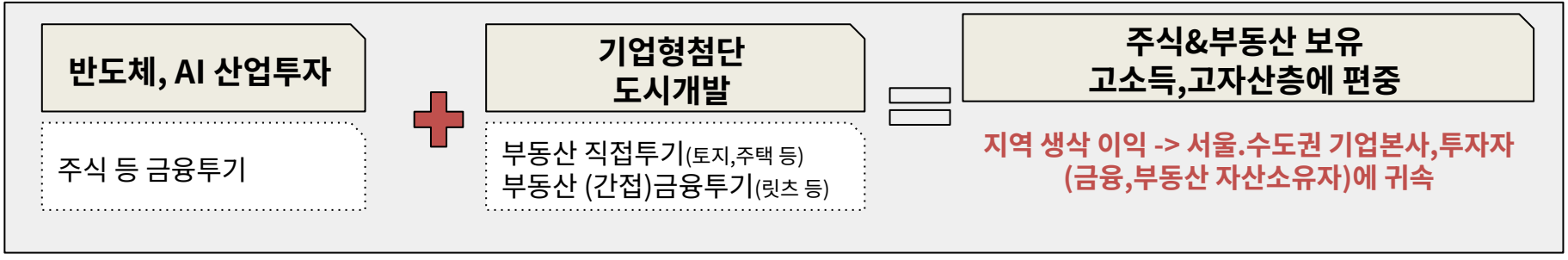


지역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자산불평등 악화 구조



AI와 반도체라는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와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기대가 서로의 몸을 빌려 부풀어 오른다

- 3대 메가프로젝트는 **'산업투자'** 사업인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도시 조성은 **산업 금융투기**와 **부동산 금융투기**가 **하나의 구조로 연결**
  - AI와 반도체 기업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금융투기와 첨단도시 주변의 토지·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 동시 진행
  - 대규모 도시개발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통해 추진. 리츠와 각종 부동산 간접금융상품 결합해, **개발 기대 자체가 하나의 금융투자 대상**이 됨
  -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한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현행 구조 하에서 이익은 훨씬 많은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게 편중
  - **금융투기의 속성**상 **지역에 유치한 산업 발전과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의 상당수는 **기업 본사와 투자자들에게 귀속. 지역에서의 생산 이익이 서울·수도권의 기업과 자산소유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작동



지역균형발전? 지역 내부의 공간적 불평등과 계층적 분리화

- 기업형 첨단도시에 '우수 인재가 지방에서도 수도권에 필적하는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공급 추진 등 산단 인근 주거・문화 등이 결합된 복합타운(매력도시)'을 조성한다고 발표
  - 첨단산업 고소득 전문인력 집중 -> (주택수요) 고가 분양아파트 중심 증가 -> 지역 전반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산업 전트리피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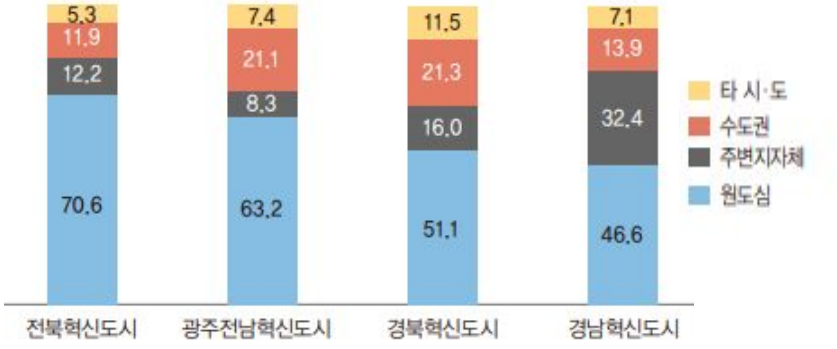
- 동일 지역권역 내 신도시와 기존 도심 사이의 **새로운 공간적 불평등 생산. 이는 소득계층별 공간적 분리화 동반**
  - 신사업 유치와 첨단도시 조성이 지역 전체의 성장이 아닌 **지역 내부의 성장축 이동**을 초래해 **지역내 불균형과 불평등 강화**
  - 새로운 거점 도시 수요에 맞춰 최신 인프라와 생활서비스 집중. 기존 도심은 주택과 기반시설 노후화 방치, 상권 쇠퇴 등 초래
  - 공공투자의 배분 자체가 공간적으로 불평등해 짐(인프라 투자의 불평등에 그치지 않고, 한정된 공공 재정의 불균등 배분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공의료·돌봄, 공공교통 등의 재정투입도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소득계층별 공간적 분리 동반: 주거이동 능력에 따른 **계층적 분리화**

	첨단 신도시 (성장거점)	**기존 도심**
공간적 불평등	교육,문화, 의료 등 생활 서비스, 공공 인프라 집중 (대규모 공공투자 집중)	구도심화 촉진(노후화, 상권쇠퇴) 생활 인프라 개선 투자 후퇴
계층적 분리화	주거이동 능력이 높은 전문직과 중고소득 계층 신도시로 이동	주거이동 능력이 낮은 고령층, 저소득층 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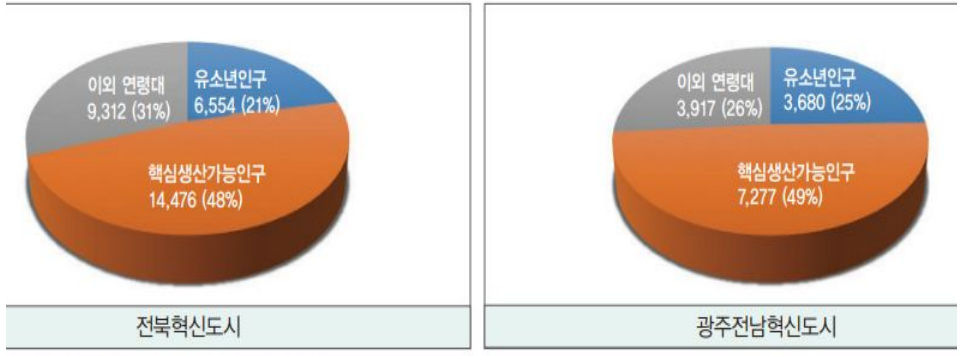
지역균형발전? 지역 내부의 공간적 불평등과 계층적 분리화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인구이동 특성 분석**(국토연구원,2018)
  - 혁신도시 정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 내 불균형 문제 발생
  - 7개 혁신도시의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유소년(0~14세) 및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에 해당하여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발전 격차
    ※ 원도심 → 혁신도시 6.9만 명 순유출, 주변지자체 → 혁신도시 1.5만 명 순유출(2012~2016년)

혁신도시별 순유입인구 구성(%)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 순유출인구의 연령대 구성(2012~2016년)



출처: 국토연구원, 2018.12.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과제, 국토정책Brief. No693호

[초광역특구법] 불평등을 강화할 주거/도시계획 규제완화(민주당 최기상, 박상혁 의원안)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20조)] 대규모 산업투자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각종 도시계획 결정을 특구계획 승인으로 갈음. **지역의 장기적인 토지이용과 개발 방향을 기업의 투자계획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음**
- **[민간 사업시행자 참여와 토지수용 특례**(제19조, 제31조)] 민간**기업** 등에도 개발사업 시행과 **토지수용**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생계와 주거를 보호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장치는 부족**함
- **[개발부담금 감면과 개발이익 재투자** (최기상안 제247조·제175조, 박상혁안 제253조·제181조)] **개발부담금 감면으로 공공의 개발이익 환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도 산업시설 용지의 공급가격과 임대료 인하 등에 집중하도록 함. **공공의 정책결정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기업과 토지·부동산 소유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임.**
-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이용 관리** (최기상안 제253조·박상혁안 제259조)] 부동산 투기 방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토지거래나 전매 제한에 집중되어 있음. 합법적인 개발과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지가 상승 및 자산 불평등을 억제할 장치 불충분**
- **[주택건설용 토지 우선공급, 주택공급기준과 분양가격 특례** (제55조, 제56조)] 특구기업과 기관에 주택건설용 토지를 우선 공급하고 주택공급기준과 분양가격에 특례를 부여하면서, 기존 주민과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족함. **기업 중심의 산업개발이 주거 불평등과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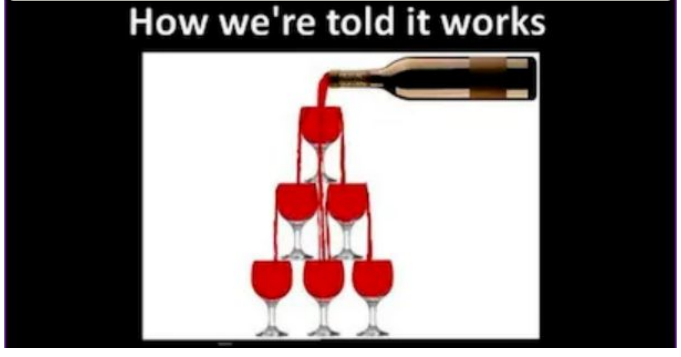
그들만의 황금시대, 강탈로 만든 풍요는 결코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다

-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지방주도 성장전략**은 대규모 공공지원을 배경으로 한 **기업과 자산소유자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큼
-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라는 구도로 정당화되는 지역균형발전론**이**, 지역 내부의 공간적·계층적 불평등 악화를 감추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음
- **지역내총생산(GRDP)**과 **부동산 가치 상승**이 **지역 발전의 행정지표**가 될지는 몰라도, 그 지역의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의 삶의 조건은 **주거비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로 이어짐
  - 어떤 기업을 유치했는지? 지역내총생산(GRDP)이 얼마나 늘었는지? 땅값이 얼마나 상승했는지?가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표시하는 행정지표가 될지 몰라도, 지역 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었다고 할 수 없음
- 국가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돌리기 위해 누군가는 농지와 일터, 삶터에서 밀려나고 막대한 전기와 용수 등 생태계가 비용을 대신 치른다면, 그것을 '지역발전'이나 '성장'이라고 할 수 없음
- 이러한 성장 논리는 **기후·생태에 대한 강탈**인 동시에 **공간에 대한 강탈**로 이루어지는 성장임

3개 메가프로젝트, 그들만의 황금시대

강탈로 만든 풍요는 결코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다

모두의 풍요라는 낙수효과의 장밋빛



현실은, 그들만의 풍요

